

“열심히 일만 했는데...” 한 이주노동자의 눈물

광주서 근무중인 캄보디아 카임씨 갑작스런 강제 출국 통보 ‘날벼락’ 이직한 회사 고용허가서 신청 안해 전문가 “해석” 따라 해결 가능성도

국내 노동 시장서 이주노동자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대우나 행정조치는 업체에 맡기는 등 주먹구구식여서 노동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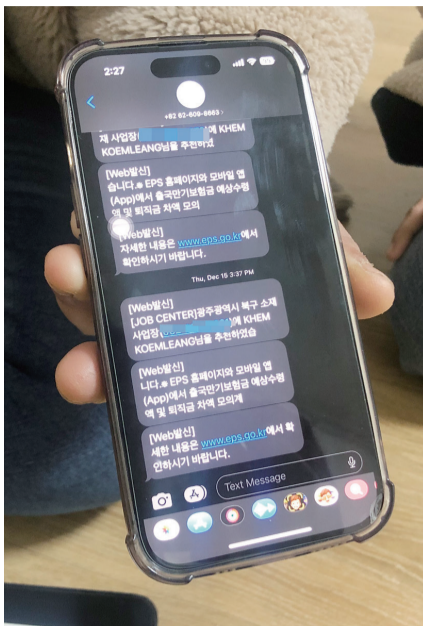
특히 사업주의 부실한 일 처리로 인해 졸지에 ‘불법체류자’가 된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허가 주체를 사업주로 규정하는 ‘고용허가제’의 한계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약 한 달 전 새로운 회사에 재취업한 이주노동자 카임 금림(24)씨에게 최근 광주고용센터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사업주의 고용허가서 발급 기간이 지나 출국해야 한다”는 내용이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 시 ‘직전 사업장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해야 하며, 재취업 이주노동자를 고용키로 한 사업주는 해당 기간 내 고용센터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노동자는 출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카임씨의 고용허가 기간 ‘3개월’은 지난해 12월19일까지였다. 문



고용센터가 카임 금림씨에게 보낸 고용 추천 문자.

제는 이때까지 사업주가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임씨는 직전 사업장서 퇴사 후 같은 달 복구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에 재취업했다.

사업주는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당일 카임씨를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고용센터에 회신했고, 이후 필요한 서류도 모두 제출했다고 했다. 카임씨는 고용센터와 통화 후 사업주에게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를 확인했으나, ‘고용센터가 고용허가서 발급은 조금 늦어도 상관없다고 했다’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다.

반면 고용센터의 말은 달랐다. 그들은



사업주가 고용허가 발급서 신청 기간을 놓쳐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한 광주 이주노동자 카임 금림(오른쪽)씨와 그의 누나.

‘고용허가서 발급 기한에 대해 충분히 안 내했다’는 입장만 반복할 따름이었다.

양측의 말이 서로 엇갈리면서, 책임은 엉뚱하게도 카임씨 혼자 안아야 했다.

카임씨는 “나는 ‘모든 게 완료됐다’는 사업주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며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들에겐 ‘겨울이라 일이 없어 쉬고 있다’고만 말하고 출국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내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잘못된 것이 없는데, 이대로 출국하기엔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막막하던 카임씨는 광주이주민센터와

시민단체 등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소개 받았고 여러 관계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 명령 날짜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고용센터는 “사업주는 물론 카임씨에게도 모국어로 된 안내문을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기간을 안내했지만, 사업주가 날짜를 착각하거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서울과 경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땅한 해결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률의 ‘해석’에 따라 충분히 구제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주노동자 사건을 주로 맡아 온 김춘호 변호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질병, 임신,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고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고용센터는 카임씨의 고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카임씨의 사례 또한 이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고용허가서 발급 주체를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로만 규정하는 ‘고용허가제’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홍업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사업주의 실수 등으로 고용허가 기간이 도과돼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자가 된 사례는 이전부터 꾸준히 발생해온 일”이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주민 관련 기관·단체 등에 도움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고용센터의 재량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 권네트워킹은 카임씨와 함께 법적 대응을 논의 중이다.

글·사진·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조직개편 추진 동력’...시교육청 2566명 인사

교육전문직 인사 폭 전보다 늘어 진로진학과 신설·대학 직원 파견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3월1일 실시되는 조직개편에 맞춰 교육공무원 2566명(유치원 교원 78명·초등 교원 1428명·중등 교원 936명·교육전문직원 124명)에 대한 정기 인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관련인사 17면

이번 인사는 직선 4기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 교육상을 구현하고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시민’ 교육지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탓에 전보다 교육 전문직원의 인사 폭이 커진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정종 동부교육

지원청 장학관이 전남대로 파견돼 교원 연수나 학생 교육, 고교학점제 대비 학과 개설 등 소통·협력 업무를 맡는다는 점이다. 광주시교육청 직원이 대학교로 파견 나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설되는 진로진학과장에는 중등교육과 박철영 장학관이 승진 임용됐다. 고교배정방식 변화에 따른 진로·진학·취업 교육 내실화 등 업무를 맡게 된다.

광주체고 엄길훈 교감이 체육예술인성 교육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조병현 중등교육과장이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오하숙 광주제석초 교장이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윤흥현 대광여고 교장(홍북학원 파견)이 학생해양수련원장으로 부임한다.

반면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교육전문직 공개 전형에 읍주운전 전력자가 최종 합격했다. 애초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공개 전형 아닌가”라며 “읍주운전 전력이 있는 해당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난데없이 ‘징계기록말소

후 지원가능’이라는 조건을 명시했다. 읍주운전에 대한 잦아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시대에 사회적 비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 초등 인사관리 담당자는 “2022년 1월1일부터 교육부의 읍주운전 관련 인사 지침이 보다 구체화 되면서 광주시교육청 역시 해당 지침을 따라왔다. 앞선 인사에서도 해당 기준을 적용했다”며 “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조건에 해당하는 인물이 합격을 한 것 뿐이다. 읍주운전 징계기록이 말소된 건 10년 정도 지난 일”이라고 답했다. 양기람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